

지식재산을 통한 디지털 신기술 보호

- ▶ AI 창작물, 데이터, 화상디자인,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
- ▶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
 - ▶ 전자책 앱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 보호,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행위 제재 등



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심사·심판 서비스 개선

- ▶ 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한 특허·상표·디자인 심사 제도 정비
 - ▶ AI, 자율주행 등 디지털·융복합 산업 심사 가이드 마련,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 심사기준 마련, 디지털·융복합 분야 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
- ▶ AI 특허·디자인 검색, AI 기계번역 등 심사시스템 고도화, 비대면 고객지원 확대(전자출원, 영상면담, AI 챗봇 상담 등)



디지털 통상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

- ▶ 주요 통상협정 및 디지털 전환 추세를 고려한 지식재산 통상전략 수립
 - ▶ 영업비밀 보호규정 구체화, 화상디자인 보호 강화, 상품판매 매개자의 간접침해규정 신설 등
- ▶ WIPO 및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국제규범 선도
 - ▶ (WIPO) 디지털 시대 지재권의 역할에 대한 WIPO 공동연구 및 국제 아젠다화 (선진국) 특허공동심사 확대, (신남방·신북방) 특허인정협약, 디자인 신속심사협력 확산



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R&D 및 산업전략 수립 지원

- ▶ 디지털,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 · 산업 특허 빅데이터 분석(7개 분야),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IP-R&D 지원 강화(526개 과제, 404억원)
- ▶ 6G 등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, 5G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 표준화 지원 강화
- ▶ 대형 R&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(CPO) 파견 추진
- ▶ 민간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촉진
 - ▶ 상표, 디자인 지식재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품화 · 마케팅 등 사업전략 제공
 - ▶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데이터 생성
(예: 특허정보 내 실험데이터와 소재 DB를 연계 → AI 기반 신소재연구용 산업데이터 생성)


 BIG
DATA

지식재산 데이터 분석 · 개방 확대

- ▶ 산업-경제-특허 데이터를 연계 · 분석하는 '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' 구축
- ▶ IP분야 AI 학습데이터(기계번역, 상표 · 이미지검색 등) 개방, IP데이터기프트 지원 확대



지식재산을 활용한 스케일업 지원

- ▶ (IP금융)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권으로 확대, IP투자펀드 신규조성(500억원), 민간 IP투자상품 출시로 IP직접투자 활성화
- ▶ (IP거래) 컨설팅 기반 민간 IP거래 전문기관 육성(12개), 대학·공공연특허 및 국유특허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
 - ▶ 대학·공공연 포기특허의 발명자 양도 허용, 국유특허 사용계약 제한 완화(1회만 허용 → 사업화까지 반복 갱신)
- ▶ (세제) 출원·등록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혜택 확대, 특허박스제도 도입 검토



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

- ▶ (권리획득) IP출원펀드 조성(60억원)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비용 지원(연 3,500건)
- ▶ (분쟁대응) '지재권분쟁 대응센터'를 통해 분쟁동향 모니터링 후 원스톱 지원, 러시아·멕시코 IP-DESK 신설(총 11개국 17개소)로 해외 지원 거점 확충
- ▶ (K-브랜드)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(게시물 차단, 상표 무효심판 등) 경찰청·인터폴·신남북방 단속기관과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 강화



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육성

- ▶ 권역별 IP중점대학(3개)을 지정하여, IP빅데이터, IP금융 등 특화 전문인력 양성



지식재산 보호법제 개선

▶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

- ▶ (벌칙 강화) 계획적인 인력 빼가기에 대한 법인 가중처벌, 침해이익 몰수 등
- ▶ (수사 강화) 영업비밀 취득 · 사용 · 누설 외에, 무단유출 등도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에 포함, 비밀심리절차 신설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증거에 대한 조사 · 심리절차 개선

▶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명령 · 시정명령위반죄 도입

▶ 지속적인 업계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방안 모색

- ▶ 제도 도입과 함께, 중소기업 대상 분쟁대응 전략 지원 등 기업 지원방안 마련 병행



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철저한 감시 · 집행

▶ 기술탈취 ·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확충

- ▶ (체계) 지식재산 조사 · 수사 전담체계 구축
- ▶ (인력 · 장비)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수사 전문인력 확충, 포렌식 장비 도입 등

▶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차단 대책 추진

- ▶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강화(재택 모니터링 인원 및 단속건수): ('20) 126명, 12.6만건 → ('21) 153명, 17만건(예상)
- ▶ 온라인사업자들의 위조상품 유통 차단 책임 강화(상표법 개정),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先보상제 도입 확산

